

---

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

#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

---

2018. 1.



여성가족부



## 목 차



I . 2018년 업무추진 여건 .....	1
II . 2018년 업무추진방향 .....	3
III 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4
①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 해소 .....	5
②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 .....	12
③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.....	18
④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 .....	25
[붙임] 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.....	33

## 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### □ 성평등이 지속가능 사회의 핵심 가치라는 공감대 확산

#### ○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개선 등 양성평등 정책 중요성 증가

※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50% 감소시 한국의 GDP는 9.8% 증가('12, OECD)

#### ○ 여성혐오와 차별, 성폭력 관련 이슈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양성평등 문화 및 교육 확산 필요성 제기

※ '성평등' 빅데이터 분석 결과(최근 3년) : 부정 연관어 1위(여성혐오), 2위(차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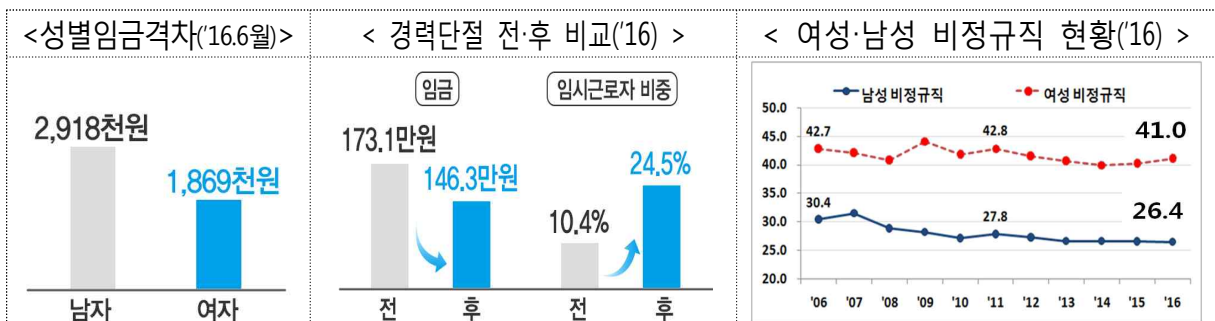
#### ○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인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필요성 증대

⇒ **공감과 소통으로 성평등 확산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 요구**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혁신성장을 주도할 여성인력의 중요성 대두

#### ○ 인구절벽·고용절벽 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조건이나, 고용상 성별 격차와 성차별 관행 지속

#### ○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는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경력단절 예방 필요



⇒ **경력단절 사전 예방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 요구**

□ **촛불광장에서 확인된 청소년 참여 욕구 해소 및 위기청소년의 체계적 지원 필요**

-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
사회 참여욕구를 표출할 참여의 장 마련 필요
-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·보호·자립의 종합적 지원체계 강화 필요
  - ※ 학교 밖 청소년은 39만 여명,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은 77만 여명으로 추산('16년, 11~18세 청소년의 17.7%)
- 스마트폰 과의존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요구
  - ※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(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)  
: 30.6% (초등학생 23.6%, 중학생 34.7%, 고등학생 29.5%)

⇒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역량 제고 및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 필요

□ **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가족위기 심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**

- 다양한 가족 증가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필요



- ※ △ 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지원 1순위 : 생계비·양육비('15년, 한부모가족 실태조사)  
△ 문화차이와 차별·편견 등으로 한국생활 어려움 : 38.3%('15년, 다문화가족 실태조사)
-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가정 내 돌봄을 선호하지만 아이돌봄 대기수요, 방과후 초등돌봄 부족 등 공백 발생
  - ※ △ 영아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면 시설이용을 하지 않겠다 : 21.8%('15년, 복지부)  
△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낮음('17년, 통계청)  
: 6세 이하(39.7%), 7~12세(52.7%), 13~17세(58.3%)
-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및 서비스 강화 필요
  - ※ 아동학대의 약 80%가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, 그 원인으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(약 35%)을 차지('16년 전국아동학대보고서)

⇒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및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중요

## II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- ◇ '18년은 '여성·가족·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' 원년으로,
- △ 소통과 거버넌스로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, 3대 폭력(아동학대, 청소년폭력, 젠더폭력)에 적극 대처
  - △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로 소득주도·혁신성장 선도
  - △ 일·생활 균형과 돌봄의 국가책임성 강화로 저출산 완화
  - ☞ 국민이 공감하고,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 창출

### ① 정부 주도에서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협업체제로 개편

- 정책 수요자·지역기관·단체 등 민간의 정책 과정 참여와 소통 강화
-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
-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성 제고

### ② 경력단절 사후대책에서 사전예방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

- 세대별 여성 일자리 정책과 경력단절 사전 예방 기능 강화
-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및 사회적 경제 등 여성 일자리 창출
-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일·생활 균형 등 성평등 기업 문화 조성

### ③ 위기 가족·청소년 중심에서 모든 가족·청소년으로 정책 대상 확대

- 가족유형별 자녀 양육 및 자립여건 개선으로 사회적 차별 개선
-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로 양육여건 개선
- 역량중심,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 전환으로 능동적·창의적 역량 제고

### ④ 분절적·사후적 지원에서 통합적·예방적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

- 일상생활 속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와 여성폭력 예방환경 조성
-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위기가족 지원 확대 및 가족관계 개선
-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촘촘하고,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망 강화

### 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**비전**

**여성·가족·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**

**정책  
목표**

**일터와  
삶터에서의  
성차별 해소**

**여성폭력 예방  
및 대응력 강화**

**다양한 가족의  
삶의 질 향상**

**청소년 역량강화와  
균형있는 성장**

**실천  
과제**

양성평등 정책  
추진체계 개편  
및 실행력 강화

신속하고 강력한  
여성폭력 대응체계  
마련

가족역량 강화를  
위한 기반 조성

청소년 활동 및  
성장지원 기반 혁신

소통과 거버넌스로  
양성평등 문화 확산

여성폭력 피해자  
중심의 지원서비스  
내실화

지역사회 중심  
돌봄 공동체 활성화

청소년의 진로찾기  
지원 강화

혁신성장을 위한  
여성일자리 창출

예방교육 실효성  
제고 및 홍보 강화

아이돌봄 서비스  
확대로 육아의  
국가책임성 강화

청소년 근로권익  
보호를 위한  
찾아가는 서비스 확대

성별임금격차  
해소 등 성차별  
고용환경 개선

아동·청소년 대상  
성범죄 예방 및  
대응 강화

다양한 가족의  
안정적 양육 및  
자립지원 확대

위기청소년을  
위한 촘촘한  
안전망

공공·민간·지역에서의  
여성의사결정권한  
강화

일본군'위안부'피해자  
명예와 존엄회복 및  
생활안정 지원

다문화 가족  
인권보호 및 참여  
확대

청소년 민주시민  
역량 제고와 지자체  
청소년 정책 활성화

- ◆(국민 체감)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으로 신뢰성 제고
- ◆(소통·협업) 부처·민간·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 효과성 증대
- ◆(현안 대응) 차별·젠더폭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강화

## 1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차별 해소

### 1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실행력 강화

- ◆ 양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등 단계적 추진
- ◆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

#### □ 양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 기능 및 거버넌스 강화

- 범부처 정책 조정·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내실화 및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\* 설치,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단계적 추진  
\* (국정과제 세부내용)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 사무국 신설 및 전담인력 배치
- 국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강화  
\* 시민단체, 온라인 커뮤니티, 부처별 성평등 관련 위원회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
- 지역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 회의 등 중앙·지역 상시 협력체계 운영('18.2월) 및 지역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

#### □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

- 「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」 이행지원\*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부 정책 개선  
\* 성평등 목표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개정 추진
-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\* 추진  
\* 전문가 심층 분석 도입 및 평가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반영확대 등
-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 유도

##### 주요 대상 정책 및 개선과제 (예시)

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 
제한 규정

▪ 「변호사시험법」상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 사유로 '출산' 등 규정 방안 검토

건설현장 여성근로자  
편의시설 지원 정책

▪ 편의시설 설치·이용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 마련  
▪ 편의시설 현황 및 성별 만족도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

- 여성 건강 이슈(피임 및 인공임신중절, 산후 및 양육 우울증 등)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대응



## 2 소통과 거버넌스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

- ◆ 청년여성, 남성 등과의 소통참여 강화로 성별 격차 해소 및 생활 속 성평등 확산
- ◆ 미디어·온라인·생활환경에서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

### □ 청년여성, 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

- 2030 여성 정책 수요자의 직접 참여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
  - 취업 준비생, 워킹맘 등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「청년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\*」 구성·운영
  - \* 주요 정책 입안부터 발표까지 정책수요자가 참여
- 5대 권역별\*로 성평등에 선도적인 남성이 참여하는 「성평등보이스」 출범·운영('18.7월), 성평등 남성 참여 모델을 지역으로 확산
  - \* 5대 권역 : 서울·경기, 충청, 강원, 호남, 영남
- 문화·예술·교육 분야 「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」 추진

#### 문화·예술·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

4 대 분 야       10 대 과 제	영화 · 음악 · 미술	① 여성영화인들과 만남, 영화를 통한 성평등 가치 확산 ② 여성주의 뮤지션들과의 만남 * 힙합 장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, 여성혐오 등의 문제 및 인식개선 논의 ③ 미술작품, 여성문화사 등을 통한 여성의 현실과 이상 고민 * (21세기 신여성 만나다) '신여성, 도착하다' 미술전과 연계, 여성에 대한 정치적·제도적 불평등 문제 논의
	도서 출판	④ 작가·출판사의 성평등 도서 제작·발간 의욕 고취 * 성평등 우수도서 공모 및 독후감 대회 등 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* TV 다시쓰기, 다시 읽는 그림책, 내가 만드는 성평등콘텐츠 등
	온라인 · 대중 매체	⑥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평등 확산 * 온라인 이용자·사업자에 대한 성인지적 자율규제 마련 등 ⑦ '미디어의 외모·성형 지상주의' 개선 * 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 ⑧ 시민·청소년으로 구성된 대중매체·온라인 모니터단 운영 * 대중매체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성차별·선정적 내용 모니터링
	교육 · 언어	⑨ 게임·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* 게임산업 종사자, 재난안전교육 강사 등 ⑩ 성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'생활용어' 개선 추진 * (외)국어 사전 모니터링 결과, '성평등 사전제작 안내 리플렛' 제작



○ 분야별·직종별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

- 교육(초중등 교사), 안전(경찰), 건축(건축관련 종사자 등), 문화·예술(영화 산업 종사자) 등 분야별·직종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\* 및 교육\*\*

\* 동영상, PPT,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법 활용

\*\* 유치원·어린이집 교사, 게임산업 종사자, 청렴·재난안전 교육 등 정부시책강사 등(600명)

- 젠더 토크 콘서트, 연극형 교육 등 소통하는 양성평등 교육 강화

□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

○ 남녀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

-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주도 조직(주민협의체) 구성 시 지역 내 여성 공동체·활동가\* 참여

\*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,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참여 전문가 등 참여 보장

○ 「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」 시범사업 추진('18년 2~3개 지역)

- 지자체와 협업하여 '여성친화컨설팅' 지원 및 여가부 관련 사업(새일센터·공동육아나눔터 등) 연계를 통해 시범모델 창출

여성친화형 도시재생뉴딜 모델(안)	
구 분	주요 내용
① 돌봄↔일자리 순환형 도시재생	지역 여성공동체(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)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일자리와 돌봄공백을 함께 해결
② 여성친화산업 특화형 도시재생	여성 특화가 가능한 산업(예: 패션봉제산업)이 집중된 지역에 여성 취·창업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 기능 통합을 통해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

- 여성친화도시 조성 단계별(조성 - 정착 - 확산) 컨설팅·교육을 차별화 하는 등 맞춤형 운영 지원

□ 성평등 교류 협력 강화

-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'여성, 체육의 새지평을 열다' 특별기획전 순회 전시('18.2.3~3.18, 평창올림픽 홍보관 내)

-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건기 운동, 글로벌 여성평화리더 초청 '세계 여성평화심포지엄' 등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연대 활동 지원

-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개최('18.하)

\* 전시주제(안) : 「여성과 정치」 또는 「여성사회 진출사」

### 3 혁신성장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

- ◆ 혁신성장을 위해 청년층, 중장년 등 세대별 여성 일자리 정책 강화
- ◆ 4차 산업혁명, 사회적경제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
- ※ 30대 여성 고용률 : ('16년) 58.3% → ('18년) 60.5% → ('22년) 6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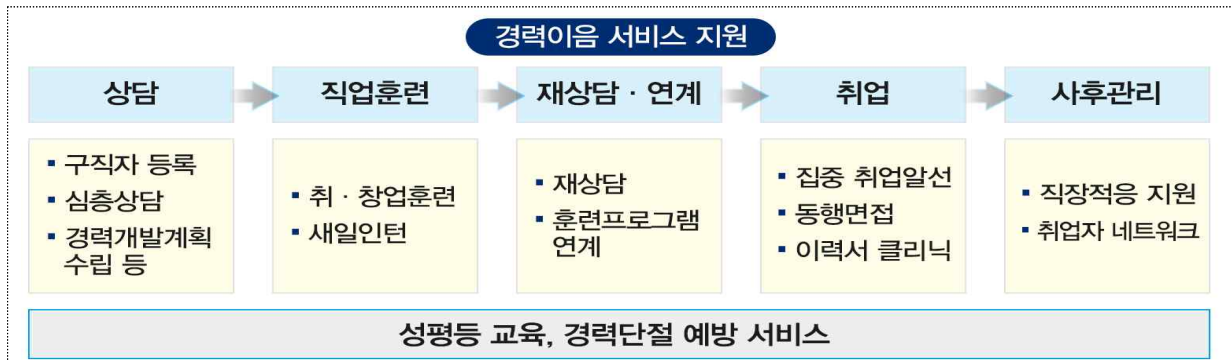
#### □ 혁신성장을 견인할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

- (청년 여성) 20-30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취·창업 커뮤니티 및 멘토링 운영

\* (대상) 니트족 20-30대 여성 중심 / (내용) 경력개발 상담, 직무능력·스타트업 및 젠더 의식 강화 프로그램, 전문가 창업자 멘토링, 동아리 및 네트워킹 ⇒ 청년 취·창업 지원

- (30대 여성)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적 취업지원을 위해 사례 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\* 도입

\* 전공·경력을 고려, 전담인력이 상담·훈련, 구인 알선 등 소과정 통합 서비스 제공



- (중장년 여성) 중앙정부, 광역·기초 지자체 협치를 통해 패션의류 등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'중장년 여성 희망 일자리' 창출

\* (예) 여성가족부-시-자치구가 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계해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

#### □ 4차 산업혁명 대비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

- 신산업 분야 여성의 직무역량 강화

- 3D프린팅, 빅 데이터, 드론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\* 및 전문 기술과정에 대한 장기 심화교육과정 운영

\* ('16년) 25개(신규도입) → ('17년) 46개 → ('18년~) 50개 내외 등 지속 확대

- 「4차 산업혁명과 여성일자리 TF(가칭)」 구성·운영

-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\* 발굴

\* 과학기술 등 유망직업군 발굴 및 취·창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

○ 「새일센터 혁신 컨설팅단」 구성·운영

- 새일센터에 대한 성과 관리 개선방안\*을 마련해 지역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

\* 일자리 전문가·공무원 등으로 구성, 새일센터 프로세스 점검 및 컨설팅 실시

○ 재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

- 여성의 직장 적응을 위한 노무·심리 상담,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, 멘토링, 자녀 진로 설계 등 프로그램 운영('18년 15개소 시범)

\* '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자 사례 관리프로그램' 보급, 일·생활 균형 캠페인 등

□ **여성이 선도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 일자리 창출**

○ 여성 중심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실태평가 및 체계적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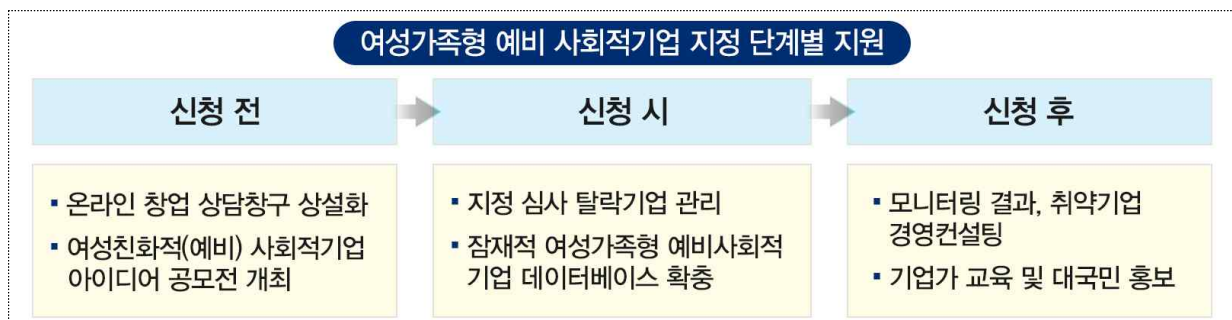
-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개선방안 도출

\* 「여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로드맵(관계부처 합동)」 수립 추진

: (주요내용) 공간·컨설팅·네트워킹·판로 등 지원 강화, 취·창업 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

-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를 위한 단계적 지원 강화

\* 임신·육아·학업 등으로 교육, 컨설팅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경력단절여성, 청년 여성을 위한 온라인 상담창구 시범운영('18.하)



○ 새일센터와 연계한 사회적 경제 분야 여성 일자리 지원

- 지역의 특화자원 등을 활용, 사회적 경제 분야 협동조합·마을기업 등 설립 지원

\* (예) 충북 영동의 포도 와인 산업 + 영동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동아리 지원 = '와인애플' 협동조합 설립

## 4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차별 고용환경 개선

- ◆ 기업과 함께하는 성평등 임금 및 채용 등 기업문화 개선
- ◆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내실화로 일·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

### □ 고용부문 성차별 관행 개선으로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

-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확산 및 정책과제 발굴
  - \* 「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」 보급('18.상),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TF 구성·운영(고용부 협업)
- 성평등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('18.하)
  - 「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약속」 선언 및 기업의 자발적 성평등 목표 설정 등 성평등 실천 기업 확산
- 공공기관 채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(관계부처 합동) 마련

### □ 일·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

- 임신·육아기 여성 대상 일·생활 균형 제도 정착 지원
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육아휴직, 비정규직 출산·육아 지원 등 일·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발굴·확산
- 남성의 가사·육아 참여 확대로 일·생활 균형 문화 확산
  -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추진
    - \* 배우자 출산휴가 단계적 확대(3일→10일),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제도개선
  - 아버지 교육 확대, 아버지 자조모임 구성·운영 등 남성 육아 지원 강화
- 가족친화인증 기업 내실화
  - 가족친화인증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, 중소·영세기업의 가족친화 기업 인증 참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
  - 일·생활 균형 중심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편\*('18.상) 등 장시간 근로 개선 중점 추진
    - \* 장시간 근로해소 방향 지표 개선 및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우수사례 추가 등

## 5 공공·민간·지역에서의 여성의사결정권한 강화

- ◆ 「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」의 철저한 이행 및 민간으로 확대
- ◆ 지역 중심으로 차세대 지역 여성리더 성장 지원

### □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유리천장 해소 및 민간으로 확산

- 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‘18~’22)」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철저한 이행점검
  - 분야별 확대 목표 달성 여부, 차별요소 제거 위한 법·제도\* 개선 등 추진내용 점검, 부진기관 개선 권고
  - \* 경찰대학 남녀 모집 폐지 모집요강, 공무원 임용령, 공기업·준정부기관 인사지침 개정 등

#### <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분야별 확대 목표(‘18년) >

- △ (공무원) 고위공무원단 6.5%, 국가직 본부 과장급 15.7%, 자치단체 과장급 13.9%
- △ (공공기관) 임원 13.4%, 관리자 22.9% (교원·교수) 국립대 교수 16.5%, 교장·교감 39.9%
- △ (군·경찰) 여성 군 간부 6.2%, 일반경찰 11.7%, 해양경찰 12%

- 기관별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평가를 위한 「여성 대표성 지표」 개발, 추진 애로사항이 있는 각 기관에 컨설팅 지원
- 성평등한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비율 관리 강화
  - \*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, 「5대 국정목표」 관련 위원회 중점관리
-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
  - 민간기업 인사담당자·CEO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 및 임원 비율 등 통계 생산·관리 추진
  - 여성 임원 확대 및 유리천장 해소 노력을 기관 투자 기준에 반영토록 권고(스튜어드십 코드 추진 지원)

### □ 지역 여성리더 성장 지원

- 지역 인재 발굴 및 경력 단계별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여성리더 성장 지원
- 지역사회 발전과 성평등 확산을 위해 여성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
  - \* 여성인재아카데미 수료자 등 지역별 네트워킹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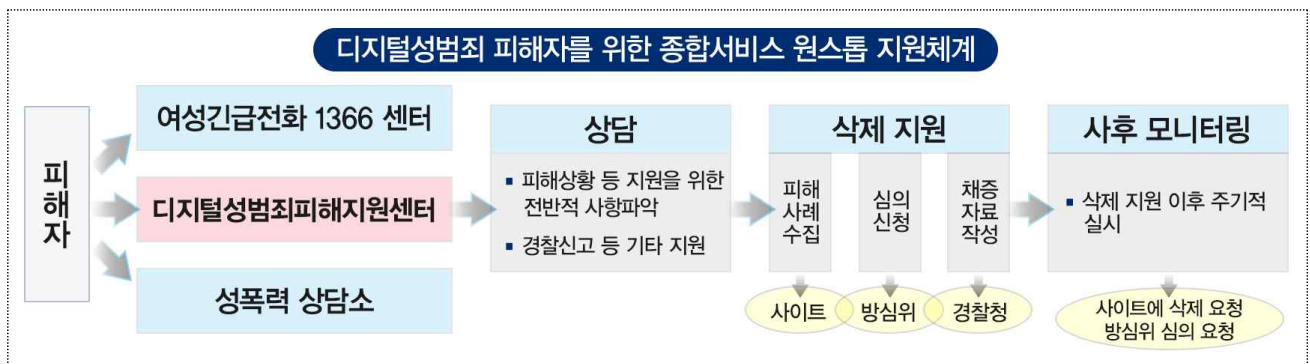
## 2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

### 1 신속하고 강력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마련

- ◆ 디지털성범죄·스토킹·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및 보호·지원체계 강화
- ◆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시스템 확립

#### □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

-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는 체계적 대응 추진
  - (처벌) 유포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·강화, 경제적 이득 몰수 등을 위한 법 제·개정 추진(법무부, 행안부)
  - (유포차단)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즉시 영상물 삭제·차단 조치, 긴급심의제도 활성화(현행 10.8일 → 2~3일, 방통위·방심위)
  - (지원) ‘상담, 수사(채증)·삭제·소송 지원, 사후모니터링’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



- (이행점점)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정책 추진 및 이행강화를 위해 ‘디지털성범죄 민·관 협의체’ 운영, 새로운 이슈 및 개선과제 지속 발굴

\* (주재) 여가부 차관, (참여) 관계부처, 관련업계, 시민단체, 학계 및 전문가 등

- 스톱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조치 강화
  - (처벌) 스톱킹범죄 처벌을 위한 법제화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기준 마련
  - (현장) 스톱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의 현장조치 강화
  - (지원)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



## □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시스템 확립

- 직장 내 성희롱 실태 파악 및 상황진단을 위한 조사 실시
  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조사\* 단계적 실시
    - \* 예방교육 계획수립 여부, 고위직 참여율,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
  -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(3년 주기) 실시
-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
  - 「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」 설치 추진, 성희롱 대응 매뉴얼 상시 게시 등 내용을 담은 「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」 개정
  - 직장 내 성폭력·성희롱 사건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    - ※ 성폭력·성희롱 결정사례·판례분석을 통하여 성폭력·성희롱 해당여부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(징계수위 등)의 적정기준 제시
  - 성희롱 방지조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
  - 피해자 및 신고자(조력자)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시 공공부문 내 기관·기관장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
- 공공부문 내 성폭력·성희롱 방지조치 모니터링 강화
  - 공공기관 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'주무 부·처·청, 지방자치단체'에 동시 제출 의무화 추진 ※ (현재)여가부에만 제출
  -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추진 등에 관한 현장 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추진
  - 공공부문 내 발생사건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·관리

## □ 여성폭력 피해 방지 정책의 중장기 추진기반 마련

- 여성폭력 피해사례 동향분석을 통한 '성폭력·성희롱 관련 연간 리포트' 발간
-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「젠더폭력방지기본법(가칭)」 마련
-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인 「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(가칭)」 수립 추진



## 2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내실화

◆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온·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및 현장 역량 강화

### 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접근성 제고

-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\* 및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\*\*

\* 여성폭력 통합상담소(10개소→20개소), 해바라기센터(38개소→39개소), 여성폭력 피해자주거지원시설(295호→315호),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신설(1개소)

\*\*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상이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등

-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지방경찰서 협업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시범 실시
- 실시간 채팅·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‘여성폭력 사이버 상담’ 활성화

### □ 성폭력·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및 건강 지원 강화

- 가정폭력 피해자 진료비용 지급절차 개선\* 등 건강 지원 강화

\* 300만원 초과 의료비 지급의 경우 : (현행) 운영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지급  
→ (개선) 주치의 소견서 및 내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급

- 디지털성범죄, 스토킹,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실시

### 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현장 역량 강화

-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법적근거 마련 및 기능강화 방안 검토
-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센터 평가 및 컨설팅 실시

### 3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홍보 강화

◆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거버넌스를 통한 폭력예방 활동 내실화

#### □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

- (공공부문) 폭력예방교육 이행 점검 강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
  - 기관장 교육 미이수, 고위직 참여율 50%미만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추가 관리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후속조치 강화\*
  - \* ‘관리자 특별교육, 기관명 언론공표’에 ‘예방교육 이행계획서 제출’ 추가
  - 예방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·보급하고, 역량별 강사양성과정 개발과 강사 DB 구축
- (일반국민) 여성폭력 예방교육 필요 분야 발굴 및 ‘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’ 적극 지원
  - 가족친화기업, 소규모 기업 등 민간기업 내 인사담당자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공 및 전문강사 연계 지원
  - 성인지적 관점 이해,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를 위해 ‘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’에 ‘양성평등 교육’ 비중 강화

#### □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협업 강화

- 민간의 성폭력·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 또는 피해자의 자조모임·활동 지원
- 아동·여성 안전지역연대\*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확산 등 지역사회 아동·여성 폭력예방 활동 내실화
  - \* (지역연대) 아동·여성 보호를 위해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·경찰·사법·의료기관, 아동·여성보호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·관 협력체계(243개 구성)
- 보라데이(매월 8일), 여성폭력 추방주간\* 계기 민관합동 여성폭력 예방캠페인 및 홍보 실시
  - \* 성폭력·가정폭력(11.25~12.1) 및 성매매(9.19~9.25) 추방 주간

## 4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

- ◆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피해방지 환경 조성
- ◆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수성에 맞는 방지 조치 및 지원 추진

### □ 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피해방지

-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상담·지원 및 온라인 성매매 유인·권유 의심정보에 대한 모니터링·신고 활성화
-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아동·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 구축 및 집중단속 강화

### □ 성매매청소년 피해자의 특수성에 맞는 전담 지원 추진

-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·청소년을 피해아동·청소년에 포함\*하고, 개별적 특성과 사례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

\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

- 청소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\*(7개소) 지정·운영

\* 상담(현장방문, 거리상담, 사이버), 보호지원(일시보호, 치료회복, 의료·법률지원), 자립지원(생활정보 제공, 진학교육, 직업훈련 등)으로 건강한 사회복귀 유도

-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예방을 위해 성매매바로알기, 자존감 향상, 심리치유 등의 맞춤형 교육(40시간) 실시

### □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

-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기준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·제공(경찰청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)

-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자 취업여부 일제 점검 추진(관계기관 합동)
- 취업제한제도 교육·홍보 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

-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·고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\*을 높이고,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위 확대\*\* 추진

\* 국민 누구나 오류정보 발견시 정정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\*\* (현행)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→ (변경)아동·청소년대상(19세 미만) 성범죄자

## 5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명예와 존엄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

◆ 전시 하 여성인권 연구를 위한 기반사업 및 기념사업 내실화

### □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문제 관련 연구·조사 및 교육·홍보사업 체계화

- 「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연구소(가칭)」 발족으로 체계적 조사·연구·교육 추진기반 마련
  - \* 「역사관·연구소 설립 관련 기초연구」를 통해 통합적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추진
-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e-역사관을 개편하여 전문성 있는 콘텐츠 확산
  - \* 다국어 페이지 추가 구성 및 e-역사관 개편방안 모색으로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문제에 관한 기록을 전 세계에 확산·공유

### □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확대

- ‘피해자 중심주의’ 원칙하에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및 관련 단체 (중앙·지방)와의 소통 강화
-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기림의 날(8.14) 관련 기념행사 실시 및 국립 망향의 동산 내 추모비 제막식 개최
- ‘위안부’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위한 국외전시 등 민간 단체 사업 지원 및 국내전시 확대(‘17년 4개 지역 → ‘18년 6개 지역)

### □ 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

-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, 건강치료비 등 지원 금액 확대



- 호스피스 의료비 지원을 요양을 위한 의료기관 입원·방문치료비 지원으로 확대(1인당 월평균 660만원) 및 장제비 상향(2백만원→3백만원)

### 3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

#### 1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

- ◆ 취약가정 중심에서 모든 가족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
- ◆ 위기가족에 대한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

##### □ 취약가족 위주에서 보편적·통합적 가족정책으로 전환

- 가족정책의 대상과 기능변화에 따른 핵심 추진과제 발굴 및 「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(’16~’20)」 보완
  - \* (주요내용) 독거 중년 남성 및 여성노인 등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, 비혼 동거가구 등 가족유형에 따른 자녀양육 차별해소 방안
-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로 지역사회 가족돌봄 허브기능 강화
  - 보편적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센터 단계적 확대
  - 지자체, 학교, 지역아동센터, 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 내 돌봄지원 기관간 연계·협력(돌봄협의체 구성 등)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
- 범시민 참여를 위한 「가족시민회의(가칭)」 등 개최로 가족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

##### □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위기가족 지원체계 강화

- 아동학대 등 위기가족 조기발견,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(긴급돌봄·가족상담 등) 및 사후관리 제공
  - \* 취약·위기가족 지원 : (’17년) 47개소(52천건) → (’18년) 61개소(60천건)



- 자녀 체벌 등 아동학대 및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·가족 특성별 부모·자녀간 관계 개선 교육(사이버·집합) 확대
  - ※ '17년 개발된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이해교육 교재(동영상·PPT 등) 및 전문 강사 활용
-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등을 지원하는 '좋은 청소년부모(Good Kidarent) 프로젝트' 추진(시범운영)
  - \* 출산부터 자녀양육까지 상담·부모역할 이해교육·아이돌봄 지원 등 종합 사례관리

## 2 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

- ◆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**맞벌이가정 돌봄 지원**
- ◆ 아파트, 작은 도서관,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읍면동 마을생활권 단위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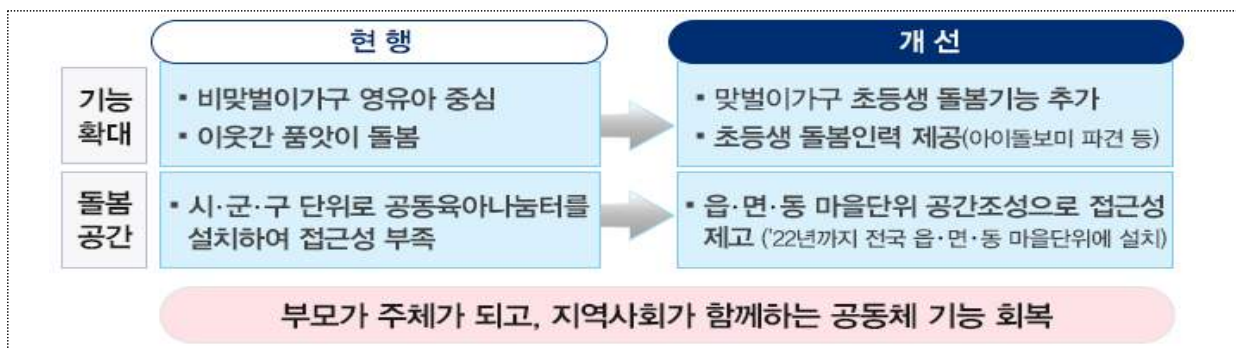
### □ 「공동육아나눔터」 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기능 강화

-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공동육아나눔터」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
- 지자체는 돌봄공간 확보, 기업은 공간 리모델링 지원, 부모가 참여하는 「운영위원회」 구성으로 민·관 거버넌스 협력 모델 구축
- 전방부대 군인가족의 독박육아 해소 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「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」 지속 확대(국방부 협조)
  - \*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 : ('17년) 12개소 → ('18년) 16개소 → ('22년) 42개소
-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「방과후아카데미」 확대 및 운영시간, 규모, 형태 등 다양화 모델 시범운영 추진
  - \* 주말형, 야간형, 인원축소형, 방과후학교연계형 시범운영 및 개소수 확대 ('17년 250개소 → '18년 260개소)

### □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나눔터 공간 확산

- 아파트 주민공동시설, 작은 도서관, 주민센터 등 공공·민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확대 추진
- 일정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나눔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(국토부 협조)

### □ 품앗이 참여 부모,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여 경력단절 및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 창출 추진





### 3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로 육아의 국가책임성 강화

- ◆ 아이돌봄 지원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
- ◆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확대

#### □ 맞벌이·한부모 등 이용가정의 양육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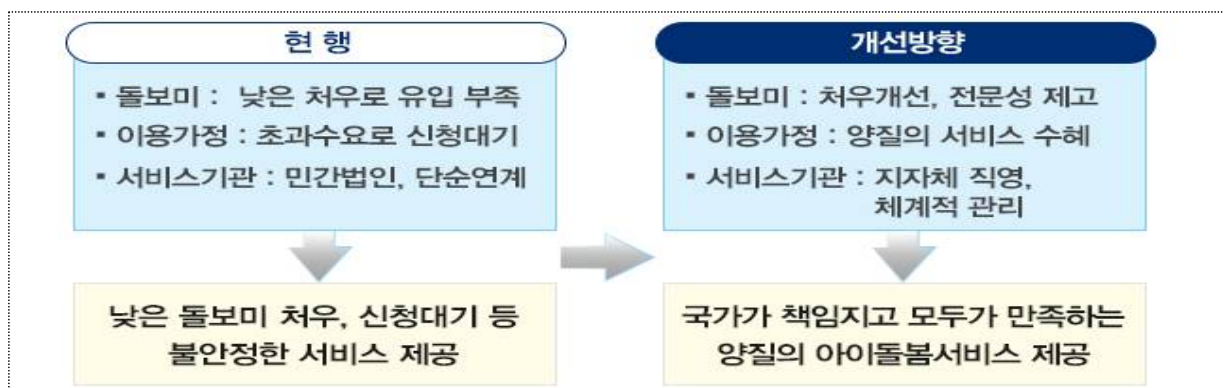
-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비율 상향\*
  - \* ('17년) 25%~75% → ('18년) 30%~80% (각 5%p 인상)
-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시간 확대\*
  - \* ('17년) 연 480시간(1일 2시간) 이내 → ('18년) 연 600시간(1일 2.5시간) 이내

#### □ 아이돌보미 대기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

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집중시간대를 설정하고, 해당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우선 투입으로 대기수요 해소
  - \* 등·하원 또는 등·하교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확보 및 즉시 매칭으로 대기가정 축소
- 보육시설, 학교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1:多 서비스 제공\*
  - \* (예) 아이돌보미 1인이 이웃가정 자녀와 함께 가정 내 돌봄을 제공(최대 3인)
- 지역별 맞춤형·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서비스 관리체계 구축
  - \* (현행) 비영리법인 지정·운영 → (개편안) 지자체 직접 설치·운영

#### □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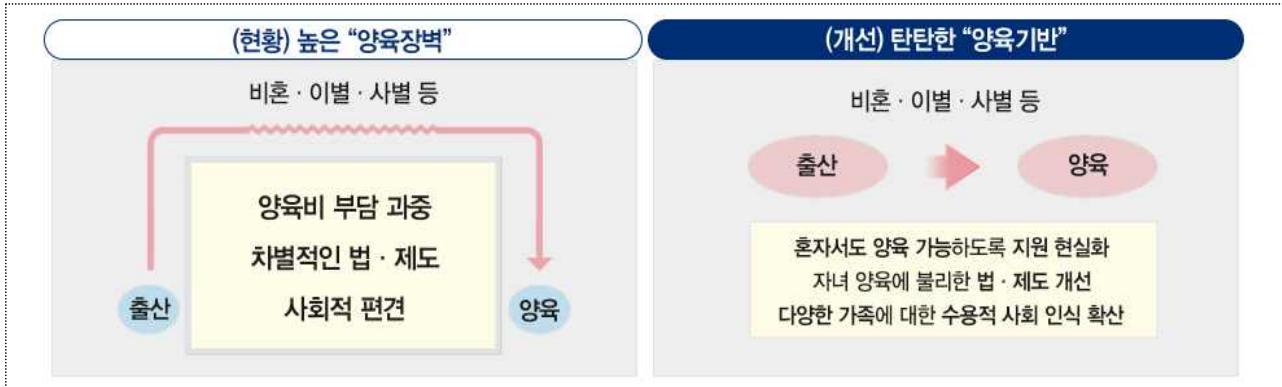
- 돌봄 수당 지속 인상\*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유사 돌봄 서비스 수준\*\*으로 개선
  - \* 시간당 돌봄 수당 : ('17년) 6,500원 → ('18년) 7,800원(20% 인상)
  - \*\* 노인돌봄·장애인활동보조 등은 약 8,070원 이상
- 양성·보수교육 내실화, 경력사유 확인 등 아이돌보미 자격관리 강화





## 4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및 자립지원 확대

- ◆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과 지원 연령 상향으로 양육여건 개선
- ◆ 한부모·미혼모 등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 및 상담서비스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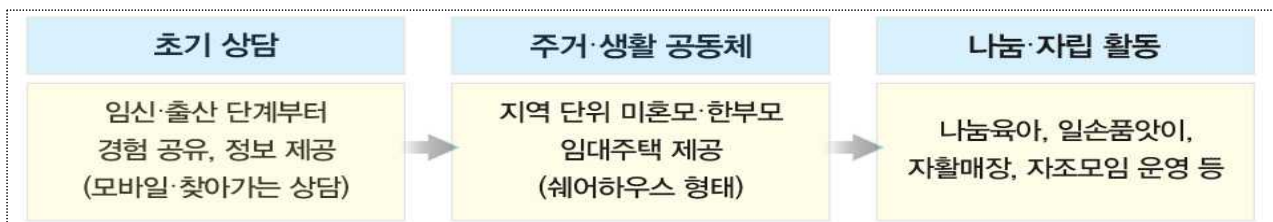
### □ 한부모·미혼모 자녀의 안정적 양육 지원

#### ○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 현실화

- 비혼모·한부모 가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비 정부지원 확대
  - \* ('17년) 만 13세 미만 연 144만원 → ('18년) 만 14세 미만 연 156만원 → ('22년) 만 16세 미만 연 180만원
- 긴급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검토
-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확대\*를 통한 비급여성 지원 강화
  - \* 중위소득 52%에서 60%로 상향(청소년한부모 가족은 60%에서 72%로 상향)
  - ※ 자녀 대학특별전형, 공직채용할당, 전기·통신 등 각종감면 실질적 혜택부여

#### ○ 미혼모 등에게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 지원

- 미혼모·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하는 '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' 시범 추진



- 학업·취업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(학용품비 포함) 및 자립촉진수당 지원

## □ 한부모·비혼 가정 등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

### ○ 비양육부모 양육비 이행 책임성 제고로 양육부담 완화

#### - 소득·재산 조사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확보

\* 양육비 이행을 제고 : ('17년) 33.0% → ('18년) 34.5%

#### -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 강화 추진(법무부 등 협조)

\* (현행) 3개월 미지급 시 감치처분 가능 → (변경) 1개월 미지급 시

#### - 안정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전담기관 기능 강화 및 대지급제 도입 검토

### ○ 자발적 양육비 이행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 개발·보급

※ 면접교섭 경험이 있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 55%('16년 전체 이행률 31.6%)

## □ 임신·출산·자녀양육 관련 상담서비스 확충

### ○ 법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이혼 전·후 가족상담 서비스 확대 추진

#### - 이혼자녀 정서안정 및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전문상담 체계 구축 및 상담 확대

\* 수행기관(건가센터 등) : ('17년) 7개소 → ('18년) 9개소 → ('22년) 전국 확대

### ○ 비혼 임신여성 상담매뉴얼 개발 및 상담서비스 시범 실시

#### - 임신·출산·양육관련 정보제공, 상담 및 건강서비스 연계, 사후관리 등

## 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

### ○ 한부모 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「한부모 가족의 날(5.10)」 제정

### ○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\* 전개

\* 양육비 이행 실천 우수사례 웹드라마 제작,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SNS 홍보단 운영

### ○ 혼인 외 출산·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·개선 추진

### ○ 다양한 가족 편견·차별 예방을 위한 자조모임 및 단체 활동 지원\*

\*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의 장 제공

## 5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및 참여 확대

- ◆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및 현지 사전교육 상담 확대 등으로 인권보호 강화
- ◆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, 자녀 대상 지원서비스 확대

### □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

-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확대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 
※ (쉼터) : ('17년) 26개소 → ('18년) 28개소
- 불법 국제결혼중개 적발 등 현지 인권보호 감시체계 및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현지사전 교육(베트남 3개소, 필리핀 1개소) 강화  
※ 현지사전교육 : ('17년) 집합 교육 → ('18년)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 추가
- 다국어 전화상담(다누리콜센터) 24시간 지원을 통해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 및 보호시설 연계

### □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강화

- 부처 간 정책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상시 협력체계 강화  
\* 초기적응, 사회참여, 인권보호, 인식제고 분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(10개 부처) 운영
-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정책참여 거버넌스 확대  
\*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: ('17년) 5개 권역별 10인 → ('18년) 각 시·도 16인 위촉
- 「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('18~'22)」 과제별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유사중복사업 점검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

### □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사례 및 지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구추진
- 다문화 가족을 둘러싼 정책 환경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
\* (국내)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일반 국민대상 다문화 수용성 조사

## □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활성화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
  - 한국어 교육, 통·번역, 멘토링, 사례관리 등 초기 정착지원 서비스 내실화
  - 결혼이민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'자립지원패키지' 확대 운영
- 기관 간 협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활성화
  - \* 결혼이주여성 취업희망정보 세일센터 제공 및 다가센터 종사자 취업연계 교육 강화

## □ 다문화가족 자녀를 미래인재로 육성 추진

- 이중언어 인재 발굴 확대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계 지원
- 리더십 개발 및 정체성 회복, 사회성 발달, 미래설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성장프로그램 확대
-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적응을 돕는 찾아가는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
  - \* (현행) 만12세 이하 아동 → (개선) 연령과 무관하게 초등학교 재학 중 아동을 포함
-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정착 지원 및 진로지원 강화
  - 평일·전일제, 주말·야간, 방과 후 등 한국어교육(레인보우스쿨) 실시
  - 한국 공교육 편입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
    - ※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 커뮤니티를 통한 매뉴얼 및 홍보물 배포 등

## □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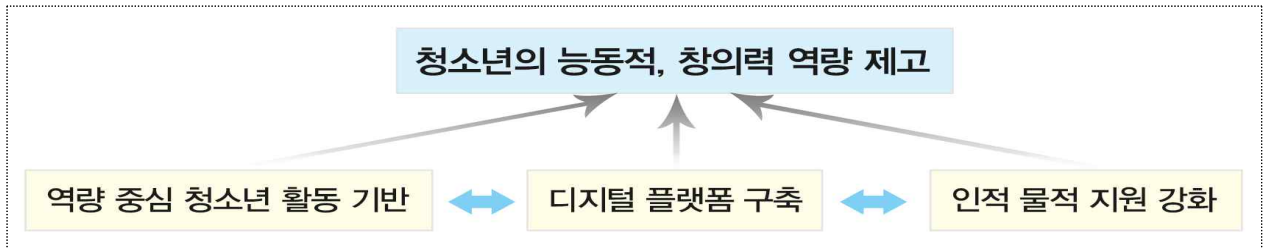
- 유치원 및 초·중·고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
  - ※ 교원 자격·직무연수 과정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포함하도록 관련법령 개정('18년)
- 주민센터, 출입국사무소 등 대민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
-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·확대
  - ※ ('17년) 6종(성인, 청소년, 교육자, 시설종사자, 직장인, 유아용) → ('18년) 8종(경찰, 군인용 추가)

## 4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

### 1 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 기반 혁신

- ◆ 4차 산업혁명 시대, 다양한 역량 개발로 창의적·융합 인재 양성
- ◆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전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마련

#### 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량 제고를 위한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



- 청소년 역량제고를 위한 **활동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**
  - 민주시민학습활동, 사회정서학습활동 등 주요활동 영역별 시범 추진
- ‘디지털플랫폼’을 통한 청소년활동 성과의 집적 및 공유 기반\* 마련
  - \* ‘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’ 활용 글로벌 활동 지식공유 기반 시범운영(’18년)
- 환경변화에 따른 **맞춤형 교육**(자격연수, 보수교육)으로 청소년지도사 역량을 강화하고,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\*
  - \* 생활권 수련시설 확대(수련관 15개, 문화의집 34개) 및 특성화국립수련시설(청소년생태센터(부산 을숙도) 및 산림센터(경북 봉화)) 건립 착공

#### □ 청소년이 만들고 실행하는 참여활동 활성화

- 지역별·분야별 다양한 문화 활동 기반 마련
  -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「시·도 청소년어울림마당 기획단」 구성·운영
  - 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 활성화로 다양한 영역의 활동 참여 확대
-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활동 강화
  - 청소년이 기획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환\*
  - \* (’17년)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→ (’18년) 전국으로 시범운영 확대 추진
  - 다양한 문제해결\*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활동 지원 확대(’17년 50개 → ’18년 75개)
  - \* 지역사회개발, 세대간 통합, 청소년권익개선 등

## □ 국내외 청소년 교류 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

- 국내 체류 유학생과의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도 및 친밀감 증진
  - 민주시민의식 공유, 성평등 프로그램, 친밀한 프로젝트 활동 등 국내 대학 기반 실질적 교류 모델 추진(시범운영)
  - 체류 유학생 대상 국가를 중국 포함, 제3세계 국가로 확대
    - \* ('17년) 한중 청소년 교류지원사업 시범 운영 → ('18년) 다국가 교류로 확대
- 국제청소년 포럼을 통해 청소년 주도형 글로벌 네트워킹 추진
  - 분야별 글로벌 테마 선정(환경, 성평등 등), 전문대표단 파견 등
  - 국제적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류 프로그램 확대

## □ 청소년활동 공간의 기능 다각화 및 이용 활성화

- 청소년시설(수련관, 문화의집 등)을 청소년활동의 허브(청소년센터)로 개편
  - 청소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'청소년 자유공간' 설치·운영 활성화
  -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시설의 활용성 제고
-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\* 및 추진체계 개선
  - \* ('17년) 건축, 토목, 기계, 소방, 전기, 가스 → ('18년) 위생 분야 추가
-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보장을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
  -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수련활동신고 제외법인(종교단체, 비영리법인·단체 등)에 대한 온라인 안전교육 확대운영

## □ 2023 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

- 세계잼버리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(안) 마련 등 제정 추진
  - 기반시설 구축 지원, 안전대책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포함
- 연도별 추진일정,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「세계잼버리 개최 종합계획\*」 수립
  - \* 잼버리 주요 영내·영외 프로그램(안), 대회 운영시스템 구성방안 등

## 2 청소년의 진로찾기 지원 강화

### ◆ 청소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진로지원 강화

#### □ 청소년의 진로탐색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강화

-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 증진 및 자립 동기 부여
  - 문화·예술·체육프로그램, 인문교육 기회 통해 사회·정서적 지원 강화
  - 진로·적성검사,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진로 지원 확대
- 지역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\* 활용,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맞는 전문 진로상담 및 진로설계 코칭 강화
  - \* 진로 관련 심리검사,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

#### □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

- 기초 직업훈련, 직장체험(인턴) 과정 지원으로 동기부여 및 취업의지 고취
  - ※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: ('17년) 7개 지역 → ('18년) 8개 지역
- 학교 밖 청소년 취·창업 기반조성
  - '창업동아리'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의인재로의 성장 지원
    - \* 비즈쿨(중기부 협력) : 청소년 대상 창업·경제교육, 창업동아리, 전문가 특강 지원 등
  - (예비)사회적기업 설립 지원\*으로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
    - \* 사회적기업 양성교육-인큐베이팅 코칭으로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' 지원
- 전문직업훈련 제공을 위한 내일이룸학교(10개소) 운영 개선
  - 단기과정 개설, 소통창구 마련 등 청소년 친화적인 직업훈련 추진
  - 심리상담, 검정고시 지원 및 자립장려금·교통비 지원 등 취업동기 제고
-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직업군 등 훈련과정의 다양화
  -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'기업 맞춤형훈련 과정' 운영, 훈련 수료 후 해당 기업으로 취업연계 지원
  -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·수요를 고려한 직업군 개발로 훈련 효과성 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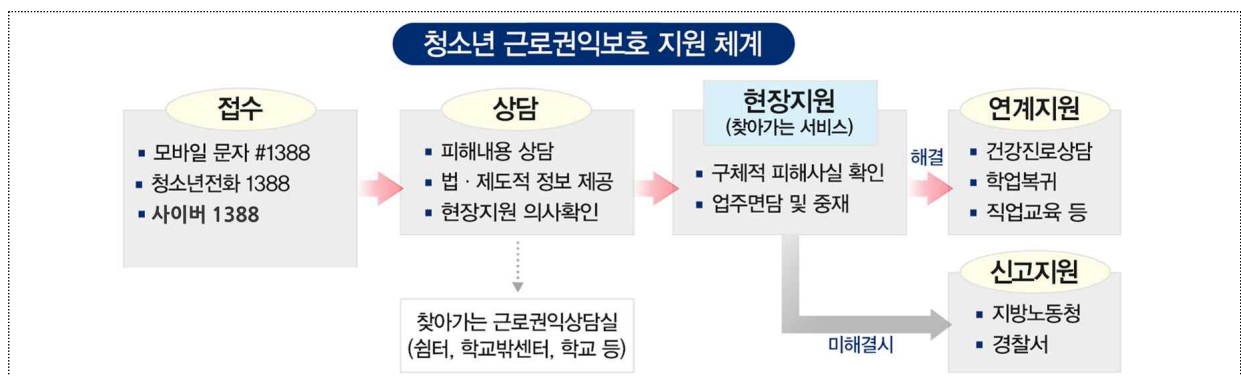
### 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

◆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를 근로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해결 지원

#### □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‘청소년 근로 현장도우미’ 연계 지원

\* (’17년) 서울·수도권 일부(5명) 시범사업 → (’18년) 서울·충북권, 충청·전라권, 경상권(21명)

-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 확인, 업주와의 면담·중재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



- 찾아가는 근로권익 상담\*을 통한 사전예방적 정보제공·현장지원 연계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전문성 강화

\* 청소년 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, 중·고교 등 400여개 기관

- 근로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연계서비스 지원

- 청소년의 근로 사유 및 여건을 파악, 청소년 관련 기관\*의 종합적 서비스(건강·진료상담, 학업복귀, 직업교육 등) 연계·지원

\* (’18년) 청소년상담복지센터(226개소)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(206개소) 등

#### □ 근로현장의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최저임금 점검 강화

- 민관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안내 및 캠페인 상시 추진

※ 전국 270개 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(단원 1만8천여명) 지정·운영

- 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지자체,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 점검 실시(연2회)

※ 방학기간 중 편의점,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(전국 50개 시·군·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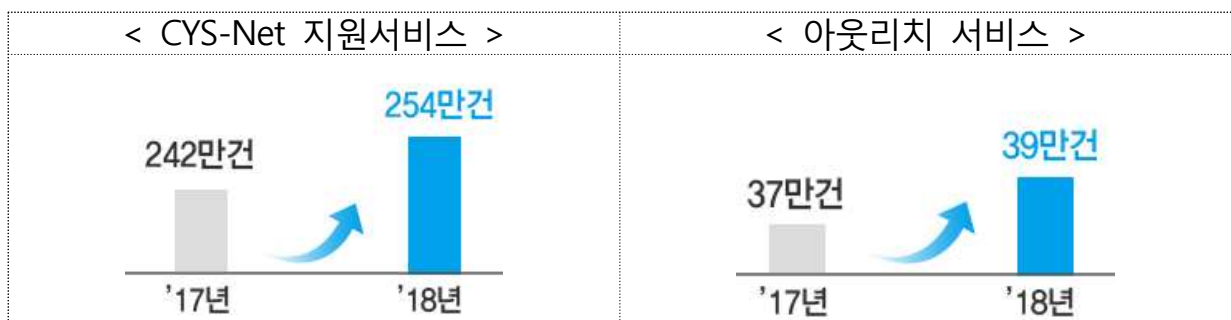
## 4 위기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

- ◆ 지자체 중심의 지역 단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대로 위기 대응력 제고
- ◆ 아웃리치(거리·사이버) 활성화로 사회안전망과의 연결 강화

### □ 위기청소년 조기발견,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

#### ○ 지역사회 중심의 틈새 없는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내실화

-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지역 단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대로 위기 대응력 제고
  - \* 학교안팎의 청소년 폭력이나 위기 사안이 지역사회 현안문제로 확대시 협의체 작동
- 다수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(CYS-Net)가 우선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
  - \* 청소년동반자 : ('17년) 1,146명 → ('18년) 1,261명
- 인터넷, 스마트폰 등 매체환경 변화에 맞게 1388 청소년상담채널 (전화·문자·사이버) 운영 개선
-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·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



#### ○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

-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(거리·사이버) 활성화
  - \* ('17년) 15개 쉼터(아웃리치센터) 30명 → ('18년) 30개 쉼터 60명(+30)
  - \* 거리상담 및 긴급지원 현장활동 시 지역 내 경찰,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연계 강화
- 비행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자립 및 생활지원 서비스 개선
  - \* 소년법 처분(제1호)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일부 청소년쉼터의 기능 전환 지원

## □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

- 관련부처·청소년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및 지원 강화
 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학력인정으로 학력취득 지원
 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\*
- \*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: ('17년) 202개소 → ('18년) 206개소
- 비행·일탈 경험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 보호·지원 강화
  - 청소년동반자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
  -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
-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모델 개발

## □ 비진학, 미취업 후기 청소년(19~24세) 사회진출 지원

-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CYS-Net) 활용, 후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방안\* 강구
- \* 무업(NEET) 및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, 지역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
- 시설(청소년쉼터 등) 입소기간 만료 후 갈 곳 없는 후기 청소년에게 주거 우선 지원\*(청소년자립지원관)을 통해 위기의 회전문 현상 차단
- \* '18년 4개소 최초 국비지원, 생활시설이 아닌 주거·자립지원 기반으로 운영

## □ 매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

-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지원 강화
  - 가족치유캠프, 부모교육 확대로 초등 저연령층 과의존에 적극 대응
  - 중·고생 청소년 대상 과의존 정도별 맞춤형 기숙치유서비스 확대\*
- \* 상설치유기관(인터넷드림마을) 프로그램 : ('17년) 14회 400명 → ('18년) 22회 600명
- 과의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 청소년 치유캠프\* 운영 확대
- \* 여성 청소년 치유캠프 운영(드림마을·인터넷치유캠프) : ('17년) 11회 → ('18년) 14회
-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·단속 강화
  - 인터넷신문 광고의 청소년유해성 심의 추진 및 모니터링 확대\*
- \* ('17년) PC버전 6,090개 → ('18년) PC 및 모바일버전 12,000개
- 인터넷 개인방송, SNS 등을 통한 유해정보의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
- \* 청소년유해영상물 성인인증 조치 점검 : ('17년) 16,000여개 → ('18년) 25,000여개

## 5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제고와 지자체 청소년 정책 활성화

- ◆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정책 활성화
- ◆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전문성 제고

### □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

-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성 및 역량 제고
  -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구성을 공개모집 위주에서 학교추천(학생회 대표), 청소년 직접선거 등 다양화하여 대표성 강화
    - ※ 위원 구성 과정 자체가 청소년의 민주시민학습의 과정이 되도록 운영
  - 정책제안 후,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, 과정을 공유하는 활동 강화
    - ※ 참여활동과정 : 문제발견 → 해결방법 조사 → 대안제시 → 실천 및 공유
- 청소년참여예산제, 청소년이 주도하는 토론회·포럼 등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정책 활성화\*
  - \* 참여활동 매뉴얼, 청소년 주도의 조례 제정 사례 등 확산('18년)
  -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 권리 등 모니터링 기능 확대\*
    - \* ('17년) 청소년정책 제안 → ('18년) 청소년 권리 등 모니터링·개선제안 기능 추가

### □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

-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확산
  - 청소년수련시설의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
  - 청소년지도자 대상 양성평등 의식 교육 강화
  - 청소년 성문화센터(전국58개)를 통해 성 인권 가치관 및 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성교육 제공
-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위험 해소
  - 청소년 상담복지 서비스·프로그램에 성차별 감수성 및 민주시민 의식을 강화하는 콘텐츠 반영
  -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특성화 직업훈련과정(내일이룸학교) 운영
  - 여성근로청소년 성희롱 피해 등 여성폭력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통합지원 연계(해바라기센터)

○ **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내실화**

-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 지원\* 추진

\* 중위소득 50%이하 만11~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위생용품 구매 가능

※ (상반기)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, (하반기) 바우처 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

- 학교 밖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시 산부인과(자궁경부세포검사) 선택 검진 추가 지원

□ **지역단위의 청소년 성장 지원 통합 모델 개발**

○ **‘청소년 성장·지원 혁신 지역’ 통합 모델 개발 및 시범실시\***

\* 대도시형, 중소도시형 등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(연구용역)

○ **지자체별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를 수요자가 종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추진**

- 지자체 여건에 따라 ‘완전 통합형’\*, ‘부분 통합형’, ‘개별형’으로 자율적 개편 유도

\*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의 모든 인프라를 청소년센터로 ‘완전 통합’ 또는 일부 시설만을 ‘부분통합’하거나 ‘개별’ 운영

\* ‘청소년 성장·지원 혁신 지역’에서 통합형 시범 운영 등 검토

□ **현장중심의 청소년정책 역량 강화**

○ **청소년지도자 교육 강화, 자격제도 개선 등 지도자 역량 제고**

-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 마련 및 현장 경험 중심의 자격제도 개선 추진

○ **청소년시설 등 광역·기초 단위 전달체계의 역할 명확화 및 재정립 추진**

○ **청소년정책 담당 및 지자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**

분야	주요내용
여 성 분 야	<p>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개편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 제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양성평등 정책 총괄·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단계적 추진,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등 양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</li> <li>○ 청년여성·남성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여성이 살기좋은 사회 조성 등 성평등 가치 확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청년이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단, 5대 권역별 ‘성평등보이스’ 출범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문화·예술·교육 분야 「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」 추진</li> </ul>
	<p>② 공공·민간에서의 여성의사결정권한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(’18~’22)」 실행 원년으로 차질 없는 계획 시행</li> <li>○ 여성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최초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여성고위공무원단 : (’17년) 6.1% → (’22년) 10%</li> <li>* 공공기관 여성임원 : (’17년) 11.8% → (’22년) 20%</li> </ul> </li> <li>○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여성임원 및 유리천장해소노력을 기관투자기준에 반영 권고, 통계 생산·관리 등</li> </ul> </li> </ul>
	<p>③ 혁신성장을 견인할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청년 여성) 20-30대 청년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취·창업 커뮤니티 및 멘토링 운영</li> <li>○ (30대 여성)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적 취업지원을 위해 사례 관리형 「경력이음서비스*」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공·경력을 고려, 전담인력이 상담·훈련, 구인 알선 등 쏠과정 통합 서비스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○ (중장년 여성) 중앙정부, 광역-기초 지자체 협치를 통해 패션의류 등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‘중장년 여성 희망 일자리’ 창출</li> </ul>
	<p>④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‘상담-수사지원(채증)-삭제지원-소송지원-사후모니터링’까지 지원(상담전화 ☎1366)</li> </ul>
	<p>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접근성 제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* 및 서비스 대상**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여성폭력 통합상담소(10개소→20개소),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신설(1개소) 등</li> <li>**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상이 스토킹·데이트폭력 피해자까지 확대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실시간 채팅·상담이 가능한 ‘여성폭력 사이버 상담’ 활성화</li> </ul>

가 족 분 야	<p><b>⑥ 미혼모·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혼모·한부모 가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<b>양육비 지원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'17년) 만 13세 미만, 연 144만원 → ('18년) 만 14세 미만, 연 156만원</li> <li>*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52%에서 60%(청소년한부모 60%에서 72%)</li> </ul> </li> <li>○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미혼모·한부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<b>‘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’</b> 시범 추진</li> </ul>
	<p><b>⑦ 아이돌봄 지원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화 확대로 돌봄 부담 경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에 <b>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 및 시간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비율 : ('17년) 25% ~ 75% → ('18년) 30% ~ 80% (각 5%p 인상)</li> <li>* 시간 : ('17년) 연 480시간(1일 2시간) 이내 → ('18년) 연 600시간(1일 2.5시간)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○ 맞벌이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<b>「공동육아나눔터」</b>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</li> </ul>
	<p><b>⑧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확대(26개소→28개소) 및 <b>외국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</b></li> <li>○ 학령기 다문화가족자녀의 학업적응을 돕는 <b>찾아가는 자녀생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현행) 만12세이하 아동 → (개선) 연령과 무관하게 초·고·재학 아동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
청 소 년 분 야	<p><b>⑨ 위기청소년 조기발견,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소년쉼터(123→130개소),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(224개→226개소), 청소년동반자(1,146→1,261명) 확대</li> <li>○ <b>청소년자립지원관(4개소)지원</b>으로, 청소년쉼터 등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</li> <li>○ 가출·거리배회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<b>‘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담요원’</b>이 30명에서 60명으로 확충</li> </ul>
	<p><b>⑩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 예방·구제를 위한 ‘청소년 근로 현장도우미’ 운영 확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('17년) 서울·수도권 일부(5명) 시범사업 → ('18년) 서울·중부권, 충청·전라권, 경상권(21명)</li> </ul>
	<p><b>⑪ 역량중심, 자기주도형 청소년 활동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역량중심 활동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시범운영</li> <li>○ 자기주도 자원봉사 등 자기주도형 사회참여활동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회참여 프로그램(75개), 자기주도 자원봉사 전국 시범운영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